

‘영구정지 해제’ 유튜브… 혐오선동가·범죄자 복귀 우려

‘세컨드 찬스’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저작권 침해 계정은 제외 했지만
혐오·폭력 콘텐츠 별도 언급없이
모호한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우회 복귀의 공식화 조치” 지적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도입이 혐오 선동 및 범죄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복귀라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글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유튜브가 과거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채널 개설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두 번째 기회)’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혐오 선동가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범죄자들의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공식화했으나,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두루뭉술한 내부 기준으로 판단 여부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된 혐오·폭력 크리에이터들도 세컨드 찬스 대상 인지’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질의에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해지됐거나 구글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또 현재로서는 유튜브

채널·구글 계정을 삭제한 크리에이터도 ‘새 채널 요청’ 옵션을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새 채널 요청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 크리에이터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을 특히 심각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했는지, 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동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채널처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쳤거나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인 해를 끼치거나, 학대·폭력·사기·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과거 논란을 일으킨 계정주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로 논란이 된 유튜버나, 폭력성 콘텐츠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제재를 받은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활동을 반복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우회 복귀’를 공식화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계정을 복귀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반면,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모호한 내부 기준으로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위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구글이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본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그 어떤 표현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컨드 찬스 정책은 플랫폼의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잘못된 예시가 됐다”며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못해도 나중에 다시 계정을 풀어주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돈이 되는 혐오 콘텐츠를 대량 양산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짐 조던 미 하원의원의 소환장 발부와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거액을 합의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알파벳은 최근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해지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정책 도입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한 것이냐’는 본지 질의에 구글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337억 대출규제 완화에 ‘사상최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명 정부, 강력 대출규제 해야”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 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 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 원, 2024년 말 337조 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뽕뽕한 한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 5000억원, 2022년 말 1013조 4000억원, 2023년 말 1064조 3000억원, 2024년 말 1123조 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정의선, 美 25% 관세·中 전기차 공세 ‘과제’

>> 1면 ‘도전과 혁신, 정의선…’서 계속

이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의 25% 관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적용을 유지하는 반면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관세를 15%로 인

하해 현대차그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분기 관세 비용은 2조 원 이상이다. 결국 미국 시장 대응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비율을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하이브리드차를 8종에서 18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부담이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는 정부 지원과 막대한 투자로 기술력은 물론 점유율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